

2024년 보험산업 과제: 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

이슈 분석

정성희 선임연구위원

요 약

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, 보험산업은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. 당국은 적극적인 세제 정책 시행 등을 통해 노후 생활 지원 을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,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방 안을 검토해야 함. 또한, 보험회사는 사업모형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해야 함

-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, 보험산업은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 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
 -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.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난 증가. 취약계층의 고용·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고.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라 경제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
 - 이러한 환경에서 보험산업은 민·관 협력 및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
- (노후 소득 지원)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.6%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나. 공적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와 사적연금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으로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한 사적연금 역할 강화가 요구됨
 - 장년층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은퇴 후 노후 생활비 확보가 어렵고, 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은퇴 후 연금수급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이 짧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
 - 퇴직연금 수급개시자 중 연금형태 수령은 7.1%(계좌 기준), 연금저축의 수령형태 중 종신형은 38.2% 수준임
 - 세제 혜택이 사적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제 정책 시행을 통해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
 - 저소득계층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이나 보조금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음
 - 정부의 세제 혜택 강화정책이 노후 소득보장으로 이어지려면,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할 유인이 되도록 세제 혜택과 연금수령방식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
 -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(예: 20년 이상)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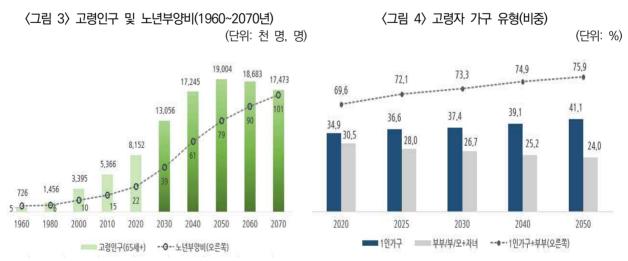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 연령대별 가계 자산의 구성

(단위: %)



자료: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 자료: 한국은행·금융감독원(2022), 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

- (노후 돌봄 지원) 향후 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('55~'63년생)의 80~90세 진입으로 요양서비스 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
 - 2035년 고령 돌봄수요는 현재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. 현재 수요에 비해 양질의 공급은 부족한 실 정으로, 특히 경직적인 공급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보험산업을 포함한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임
 - 정부는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, 보험회사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요양수요 확대 대응을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,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설계, 민간과 공공 역할 조 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



주: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임 자료: 김석영·홍보배(2023), 「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(II): 신 노년층 등장과 보험산업 대응, 『CEO Report』, 보험연구원

자료: 김석영·홍보배(2023), 「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(II): 신 노년층 등장과 보험산업 대응」, 『CEO Report』, 보험연구원

- (상생경영 확대) 보험산업 상생경영의 핵심은 보장격차 인식과 해소로, 보험계약자의 잠재적인 위험을 보험상품 을 통해 보장해 주고 그 보장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
 - 경제 여건 악화로 저소득층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, 최근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 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으로 상생경영을 추진 중임
 - 수수료 및 금리인하, 연체이자율 감면, 원금상환 지원, 채무 감면, 취약계층 대출 지원,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 설팅 제공,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등이 이에 해당함
 - 보험회사는 청년 노동자, 저소득 노년층, 임산부 및 유소년 등을 보장격차 해소가 필요한 우선 대상으로 인식하고, 모바일,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보험가입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생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보험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일본의 경우, 일부 보험회사가 텔레매틱스를 활용하여 주행 데이터를 집적하고 노면 상황과 도로 상황 등을 파악 하여 이를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고 위험을 낮춘 사례가 있음